

조국 ‘대국민 해명’에 한국당 맞불... “편법에 감성팔이”

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회견담회 나경원 “온갖 변경·기만 난무 임명 강행시 중대결정 내릴 것”

미래당 “민주주의 법치 무너져” 야권, 조국 임명면 특검 등 조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초유 ‘대국민 기자회견담회’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팀 설치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간담회를 실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온갖 변경과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문회를 할 법적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자락을 깔아줬다”며 “국회 능멸 콘서트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변명쇼로 보이콧(침묵)하

고 기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치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청문회를 기자회견담회로 대체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혐의) 피의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여권에 강력히 항의했다.

야권 반발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채택 보고서 송부가 불발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 후보자를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전제조건으로 기자회견담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언론은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기자회견담회는 의혹을 파헤치기에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야권 지적이다.

한국당은 먼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했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실시하고 반박에 나섰다. 바른미래의 경우 이번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과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허가할 경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야권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실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 대상에는 검찰 부실수사도 포함할 것 이란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향후를 밝혔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본격 추진 내년 예산 53% 증액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형 농업 방식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3.1% 늘렸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 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천477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 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노지와 축산 등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정보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하는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경북 상주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전남 고흥군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ICT 기반 농업 산업 클러스터로 창업보육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팜 기자재·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노동집약적인 노지 재배 방식을 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한우, 돼지 등 스마트 축산단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석대성 기자

방사청 중소기업 절충교역 컨설팅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사청은 3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절충교역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국내 방산중소기업은 절충교역에 대한 정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절충교역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사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중 절충교역 희망 업체에 요청에 대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업체 상황에 적합한 담당자가 찾아가 컨설팅 한게된다.

컨설팅 이후에는 업체의 절충교역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체가 요청하면 추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첨단소재 ‘그래핀·은나노’ 2종 국제표준 선점

산업부 국표원 美·日·英 등 선진국 제치고 ‘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에 대한 국제표준 2종을 한국이 선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 및 특성별 측정방법’과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두 국제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과 국가표준 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으로 개발됐고 약 5년간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그래핀 2차원 물질의 특성과 측정방

법은 그래핀 물질의 물리·화학·전기·광학적 주요 특성을 정의하고 해당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그래핀은 탄소가 0.2nm(10억분의 1m) 두께 벌집 모양의 단층 평면구조로 결합한 나노물질로 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뛰어나고 열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의 2배 이상이어서 초고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에 사용된다.

은나노 입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은나노 물질이 항균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입자의 크기를 규정하고 이후 섬유, 건축자재, 필터 등의 제품에 적용됐을 때 해당 제품의 은나노 입자 분포와 함유량 등을 측정·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은나노는 은을 나노미터(nm) 크기로 미세화한 입자다.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며 대전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균 탈취 기능을 갖춘 가전·섬유 제품, 탈취제, 공기청정필터, 페인트 등에 쓰인다.

지금까지 없던 시험 방법을 규정해 은나노 물질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나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성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재 분야 선진국과 경쟁해 이긴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

특히 은나노 입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 국제표준은 일본이 수년 전부터 표준안을 준비해왔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표준안 제안 초기부터 일본과 경쟁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與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수용... 日 보복대응책 마련”

정책 이행 일관성·지속성 유지 등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가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환경 조성, 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 주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제경영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중견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4대 그룹 연구소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놓고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통해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정책 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부품·

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먼저 R&D 지원 관련 화학 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연결과 전문 인력 파견으로 수요 기업의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량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 인력 공급도 나서기로 했다.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석대성 기자

예결위 “초당 대응, 피해 최소화” ‘日 분쟁대응소위’ 구성

제조업 제2의 르네상스 도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소위는 더불어민주당(3인)·자유한국당(2인)·바른미래당(1인)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1차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체 기술 및 소재 개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지 의원은 또 “등한시했던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불평등 협력 구조도 상생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출규제 대책 관련 관계 부처의 보고와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을 수행한다. 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